

2015 국가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15.04.18 시행)

한마디로 100% 선행정학 스타일의 출제였습니다. 20 문제 모두 이론수업이나 문풀 수업 때 강조했거나 교재에 수록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약간 생소했을 수도 있는 문8 외부효과 교정방법 문항의 경우 피구세와 코즈의 정리에 대해서는 수업 때 자주 언급하였으며, 기본서에도 실려 있는 내용이라 선행정학 심화강의를 수강한 수험생들이라면 쉽게 정답을 가릴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2대 암(?) 이라며 강조했던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문18)과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문제점(문12)에 대한 문항도 어려움이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주의를 당부했던 균형성과관리(문5), 전자정부 업무소관(문9), 신공공서비스론(문20), 징계와 소청제도(문2), 예산안 첨부서류와 헌법상 예산일정(문3) 등도 예상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변별력 있는 무난한 출제였다고 보여지며, 평소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이 아니면 80점을 넘기가 쉽지 않은 출제였다고 봅니다. 기출문제의 비중은 20문항 중 9문제(45%)였으며, 20문항 중 15문제(75%)는 소책자 <여기서 나오나>에서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국가직 행정학 시험은 선행정학으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95점 이상 또는 만점이 충분히 가능한 출제였다고 봅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제 겨우 금년도 첫 번째 시험하나가 끝났을 뿐입니다. 시험이 끝나면 늘 아쉬움이 남죠... 지난 시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며칠 쉬면서 다음 시험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중규 -

01. 최근 쓰레기 수거와 같이 전통적으로 정부의 고유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목적이 라고 보기 힘든 것은?

- ① 행정의 효율성 향상
- ② 행정의 책임성 확보
- ③ 경쟁의 촉진
- ④ 작은 정부의 실현

[답] ② 민영화의 폐단으로 행정의 책임성, 형평성, 안정성 약화 등이 있다. 민간은 유한책임은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공급할 때보다 책임성이 약화된다.

● 민영화의 효용과 폐단

효용	폐단
·경쟁을 통한 효율성	·책임성의 저하
·정부규모의 적정화	·역대리·민간부패 - 정보격차를 이용한 도덕적 해이
·근린행정의 구현	·형평성의 저해 - 약자 배려 소홀
·전문성 제고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저해
·서비스의 질 향상	·요금의 지립성 저해
·민간경제의 활성화 -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	·크립탈취 - 흑자 공기업만 인수하려는
·정부재정의 건전화	
·보수인상 요구의 자제	

·복대리로 인한 누적적 비효율 극복	정향 ·형금주 문제 - 중요지분 유지 성향 ·노조 및 주주권청의 반대
---------------------	---

- ☞ 2015 7급 선행정학 p. 70
- ☞ 2015 9급 선행정학개론 p. 62

02.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이 인사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의 한 종류로서, 임용권자가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것이다.
- ④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답] ③ 직권면직이나 직위해제, 강임 등은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가 아니다. 징계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수업 때 그리고 시험 직전 특강 등에서 수차 강조한 내용이다.

● 징계의 종류

·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고 6개월간 승급 정지
· 감봉 - 1~3월간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급 정지
· 정직 - 1~3월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2/3 를 감, 1년6월간 승급 정지
· 강등 - 1계급 하향조정(고위공무원단은 3급으로), 신분은 보유, 3개월간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2/3를 감, 1년 6월간 승급 정지
· 해임 - 강제퇴직.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 영향 X
· 파면 - 강제퇴직.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의 1/4~1/2 지급 제한

- ☞ 2015 7급 선행정학 p. 531
- ☞ 2015 9급 선행정학개론 p. 446

03.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는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 ③ 예산안편성지침은 부처의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 ④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답] ③ 예산안편성지침은 예산안첨부서류는 아니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수업 때 그리고 시험 직전 특강 등에서 수차 강조한 내용이다.

☑ ④ [O] 헌법상 제출일정이므로 90일 전이 맞다.

☞ 2015 7급 선행정학 p. 640

☞ 2015 9급 선행정학개론 p. 534

04. 예비타당성 조사의 분석 내용을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으로 구분할 때, 경제성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 ②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 ③ 사업추진 의지
- ④ 민감도 분석

[답] ④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이 있는데 전자는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적 분석기법을 사용하고, 후자는 계층화분석(AHP) 등 좀 더 질적 분석을 사용한다. 정책적 분석에서는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국가재정 전반적 관점에서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경제성 분석은 주로 비용편익분석과 민감도분석 등을 한다. 민감도분석이란 비용편익 분석을 일차적으로 한 후에 만약 통제불능 외생변수(파라미터)가 변하면 대안의 결과나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할까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의 차이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주체	주무사업부	기획재정부
조사의 초점	기술적 측면	경제적(비용편익분석 등) 정책적 측면(계층화분석법 등)
조사의 범위	당해 사업	국가재정 전반적 관점
조사기간	장기(3~4년)	단기(수개월)

☞ 2015 7급 선행정학 p. 648

☞ 2015 9급 선행정학개론 p. 542

05.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조직의 비전과 목표, 전략으로부터 도출된 성과지표의 집합체이다.
 ㄴ. 재무지표 중심의 기존 성과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ㄷ. 조직의 내부요소보다는 외부요소를 중시한다.
 ㄹ.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는 4가지 관점 간의 균형을 중시한다.
 ㅁ. 성과관리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ㄴ,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ㄷ, ㄹ, ㅁ

[답] ③ 균형성과표(BSC)는 재무와 비재무, 결과와 과정, 과거와 현재, 미래, 외부와 내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성과관리체제이다. 수업 때 수차 강조한 내용이다. 따라서 ㄷ, ㅁ은 틀리다.

- ☑ ㄷ [X] 내부(프로세스, 학습과 성장관점)와 외부(고객과 재무관점)적 관점의 균형이 필요하다.
 ㅁ [X] 과정(프로세스)과 결과(재무, 고객관점)의 균형을 중시한다.

● BSC(균형성과관리)

- 재무적 관점 - 민간이 중시
- 고객 관점 - 공공부문이 중시
- 프로세스(절차) 관점
- 학습과 성장 관점 - 미래적 관점

☞ 2015 7급 선행정학 p. 439

☞ 2015 9급 선행정학개론 p. 372

06.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회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조직이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coalition)라고 가정한다.
- ② 연합모형 또는 조직모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③ 조직이 환경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응하고 환경 변화에 수동적으로 적응한다고 한다.
- ④ 문제를 여러 하위문제로 분해하고 이들을 하위조직에게 분담시킨다고 가정한다.

[답] ③ 회사모형은 조직을 하부조직의 연합체로 보고 SOP를 활용하는 의사결정모형으로 조직은 환경에 대해 단기적 반응과 단기적 피드백을 중시한다.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장기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수업 때 수차 강조한 내용). 2015 예상문제 선행정학 28회 6번 지문 ① 참고

● 회사모형

- ① 갈등의 불완전한 해결과 제한된 합리성
- ② 불확실성의 극복이 아니라 회피, 단기적 피드백
- ③ 문제중심적 탐색
- ④ 학습된 행동규칙과 표준운영절차(SOP)의 발견

☞ 2015 7급 선행정학 p. 237

☞ 2015 9급 선행정학개론 p. 211

07.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을 수직적으로 이동시키는 내부 임용의 방법으로는 전직과 전보가 있다.
-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③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원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 ④ 임용권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직을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답] ① 전직과 전보는 직급이나 계급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직렬이나 직위만 변동되는 수평적 인사이동이다.

● 임용의 종류

신규임용 (외부임용)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특채)	
내부임용	수직적	승진, 승급, 강임
	수평적	전직, 전보, 파견, 전입, 휴직
퇴직임용	자발적	의원면직, 명예퇴직
	강제적	당연퇴직, 직권면직, 징계면직

☞ 2015 7급 선행정학 p. 515
☞ 2015 9급 선행정학개론 p. 434

08.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정적 조세(피구세; Pigouvian tax)는 사회 전체적인 최적의 생산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에 양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세를 모든 생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방법이다.
- ②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의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 ③ 코우즈(R.Coase)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 ④ 직접적 규제의 활용사례로는 일정한 양의 오염허가서(pollution permits) 혹은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이 있다.

[답] ④ 오염허가서(pollution permits) 제도란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를 신실·인정하여 이 권리를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해배출권 거래제도를 말한다. 할당된 오염량을 초과할 경우 오염부담금 등을 매기는 오염허가서 제도는 직접규제사례가 아니라 시장기제를 이용한 간접규제사례에 해당한다. 직접규제란 직접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특정행위가 형성·발생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지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 규칙 제정, 처분, 명령 등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말한다.

- ☑ ① [O] 피구세는 외부효과로 인하여 사회전체적인 최적 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에 양에 해당하는 만큼 조세로 비용부담을 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피구세에 대해서는 수업 때 강조한 내용이고 기본서에도 언급되어 있다.
- ② [O]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 ③ [O]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란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면 시장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자 간 자발적인 협상에 의하여 외부효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시장개입에 신중해야 된다는 이론이다.

● 직접규제와 간접규제

직접규제 (명령지시적 규제)	간접규제 (시장유인적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준(기술기준, 성과기준, 안전기준, 고용기준, 보건기준 등) • 규칙 제정 • 명령(시정명령) • 처분 • 차별금지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해배출 부과제도 • 공해권 경매(거래)제도 (오염허가서 제도) • 보조금제도 • 상해세 • 고용부담금제도 • 등급사정 • 정보공개 : 표시,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의 법정화 • 재량 없음, 경직성 • 정치적 설득력 및 수용성 높음 • 처벌 강함(형사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적 규제 • 재량 및 선택권 인정 • 설득력 및 수용성 약함 • 처벌 약함(과징금)

☞ 2015 7급 선행정학 p. 50
☞ 2015 9급 선행정학개론 p. 43

09. 정보화와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부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정부3.0이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가치들을 통해 국정과제를 해결하고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 ④ 스마트워크(smart work)란 영상회의 등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한 근무 형태이다.

[답] ②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미래부장관이 수립하며 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도입하여야 한다. 수업 때 수차 강조한 내용이며 기본서에도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다.

☞ 2015 7급 선행정학 p. 717
☞ 2015 9급 선행정학개론 p. 598

● 정보화 업무소관

		기능	부처
정보화	국가 정보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정보 보호	
	행정 정보화	전자정부 업무	행정자치부
		정보기술 아키텍처(ITA)	
정부참조모델(GRM)			
	개인정보 보호		

10.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산출)중심적 접근방법은 행정활동의 목표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방법으로 분권화의 확대, 권한 재조정, 명령계통 수정 등에 관심을 갖는다.
- ② 과정적 접근방법은 행정체제의 과정 또는 일의 흐름을 개선하려는 접근방법이다.
- ③ 행태적 접근방법의 하나인 조직발전(OD:Organizational

Development)은 의식적인 개입을 통해서 조직 전체의 임무수행을 효율화하려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개혁활동이다.

- ④ 문화론적 접근방법은 행정문화를 개혁함으로써 행정체제의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성취하려는 접근방법이다.

[답] ① ①은 사업이나 산출이 아니라 구조중심의 접근법에 해당한다. 기능 중복의 해소, 권한과 책임의 재조정, 명령계통 수정 등의 원리전략과 분권화의 확대는 고전적인 구조중심의 접근법에 해당한다.

● 행정개혁의 접근법

구조적 접근	원리 전략	기능 중복의 제거, 책임의 재규정, 조정 및 통제 절차의 개선, 표준적 절차의 간소화, 의사소통체계 및 통솔범위의 수정
	분권화 전략	분권화만 되면 공식조직, 행태, 의사결정까지도 변화된다는 전략
관리기술적 접근		운영과정이나 일의 흐름을 개선(OR, EDPS, MIS, RE, BPR, TQM, BSC, CBA, 문서양식, 절차, OA 등)
행태적 접근		감수성 훈련 등 OD(조직발전) 전략

- ☞ 2015 7급 선행정학 p. 694
- ☞ 2015 9급 선행정학개론 p. 579

11. 다음 중 어떠한 정책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

- ① 정책문제의 해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 ②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
- ③ 선례가 있어 관례화(routinized)된 경우
- ④ 정책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

[답] ②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의제화가 용이하지 않다. 집단행동의 딜레마(1/N)가 생기기 때문이다. 단순히 문제를 인지하는 집단이나 이해관계집단이 큰 경우와는 구별해야 한다. 문풀 수업 때 수차 강조한 내용이다.

● 정책의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문제의 중요성 : 영향을 받는 집단(이해관계집단)이 크고(많고) 문제의 내용이 대중적이고 중요한 것일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단, 이 관계가 넓게 분포되고 응집력이 약한 경우에는 의제설정이 어려워진다.
(2) 쟁점화의 정도 : 쟁점화된 것일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크다.
(3) 문제의 인지집단의 규모 : 문제를 인지(제기)하는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4) 문제의 구체성 : 논란이 있으나 문제가 추상적일 때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5) 사회적 중요성 : 사회 전체에 주는 충격의 강도(파급효과)가 클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6) 선례의 유무 : 관례화된 문제일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7) 해결책의 유무 : 해결책이 있을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8) 복잡성 여부 : 복잡한 문제보다 단순한 문제가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 ☞ 2015 7급 선행정학 p. 191
- ☞ 2015 9급 선행정학개론 p. 165

12.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할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용이

하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 ② 출입국관리, 공정거래, 근로조건 등 국가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③ 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 ④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설치한 일선행정기관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답]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가 국가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설치한 일선기관으로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불가능하고 자치행정이거나 책임행정을 저해한다. 수업 때 수차 강조한 내용이다.

● 일선기관의 필요성과 폐단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업무부담 경감 · 지역별 특성을 확보하는 정책집행 : 근린행정 · 신속한 업무처리 및 통일적 행정 수행 · 중앙과 지역 간 협력 및 광역행정의 수단 · 전문행정
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성의 결여와 자치행정 저해 ↳ 주민에 의한 민주통제 곤란으로 행정의 민주화 저해 ·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 고객의 혼란과 불편 · 종합행정 및 현지행정 저해 · 경비 증가 및 중앙통제의 강화 수단 · 자치단체와 수평적 협조 및 조정 곤란

- ☞ 2015 7급 선행정학 p. 753
- ☞ 2015 9급 선행정학개론 p. 623

13. 직위분류제에 있어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직위의 상대적 수준과 등급을 구분하는 것은?

- ① 직무평가(job evaluation)
- ② 직무분석(job analysis)
- ③ 정급(allocation)
- ④ 직급명세(class specification)

[답] ① 제시문은 직위분류제 수립절차 중 직무평가에 해당한다.

● 직위분류제 수립절차

(1) 직무기술서의 작성 : 개개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내용을 기술하게 하여 직무를 조사하는 것
(2) 직무분석(Job Analysis) : 직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처리하는 활동으로 유사한 직위를 모아 직류를 만들고, 직류를 모아 직렬을, 직렬을 모아 다시 직군을 만드는 것
(3) 직무평가(Job Evaluation) : 직무의 곤란도·책임도 등 직무의 상대적 비중 및 가치에 따라 등급과 직급을 결정하는 것
(4) 직급 명세서의 작성 : 직급별로 명칭, 자격요건, 채용조건 보수 등 들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
(5) 정급(定級) : 모든 직위를 각각 해당 직군·직렬·직류와 등급·직급에 배정하는 것

- ☞ 2015 7급 선행정학 p. 478
- ☞ 2015 9급 선행정학개론 p. 403

14. 엘리스(G.Allison)의 세 가지 의사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단적 의사결정을 국가의 정책결정에 적용하기 위해 합리적 행위자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으로 분류하였다.
- ② 관료정치모형은 조직 하위계층에의 적용가능성이 높고, 조직과정모형은 조직 상위계층에서의 적용가능성이 높다.
- ③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어느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3가지 모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 ④ 원래 국제 정치적 사건과 위기적 사건에 대응하는 정책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고안되었으나, 일반정책에도 적용 가능하다.

[답] ② 반대이다. 관료정치모형은 모형3으로 조직하부가 아니라 상층부에서 나타나는 모형이고 조직과정모형(모형2)은 하부조직에서 나타나는 모형이다.

● 앨리슨의 의사결정모형

	합리모형 (모형 I)	조직모형 (모형 II)	관료정치모형 (모형 III)
조직관	조정과 통제가 잘 된 유기체적 조직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들의 연합체	독립적인 개개인의 집합체
권력의 소재	최 고 지 도 자 가 권력 보유(집권)	반독립적인 하부 조직들이 분산 소유	개인적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
목표의 공유감	매우 높다	중간	매우 낮다
구성원 응집성	최 고 지 도 자 가 명명하고 지시(동시적 분석적 해결)	SOP에 의한 대안 추출(순차적 해결)	정치적 게임규칙에 의한 타협, 협상, 연합, 흥정(정치적 해결)
일관성	매우 강하다	약하다	매우 약하다
적용	전체계층	하위계층	상위계층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전제	합리모형	회사모형	쓰레기통모형

☞ 2015 7급 선행정학 p. 248
☞ 2015 9급 선행정학개론 p. 213

15.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확보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ㄱ.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 ㄴ.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는 경우
- ㄷ.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제3종 오류

- | | | | |
|---|---|---|---|
| ① | ㄱ | ㄴ | ㄷ |
| ② | ㄱ | ㄷ | ㄴ |
| ③ | ㄴ | ㄱ | ㄷ |
| ④ | ㄷ | ㄱ | ㄴ |

[답] ④

☑ ㄱ. 2종오류에 해당한다. 정책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여 옳은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이다.

- ㄴ. 1종오류에 해당한다. 정책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여 잘못된 대안을 선택해버린 경우이다.
- ㄷ. 3종오류에 해당한다. 문제자체를 잘못 정의한 경우이다.

☞ 2015 7급 선행정학 p. 294
☞ 2015 9급 선행정학개론 p. 249

16.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구조의 유연성이 강조된다.
- ㄴ. 조직 간 연계장치는 수직적인 협력관계에 바탕을 둔다.
- ㄷ. 개방적 의사전달과 참여보다는 타율적 관리가 강조된다.
- ㄹ. 조직의 경계는 유동적이며 모호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답] ② ㄱ, ㄷ만 옳고 ㄴ, ㄹ은 틀리다.

☑ ㄴ [X] 연계된 조직은 수평적인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ㄷ [X] 자율적 관리가 중요하다.

● 기본원리와 특징

- 공동의 목적
- 독립적인 구성원 : 분권화된 군집형 조직
- 자발적·수평적·분권적·협력적·지속적인 연결
- 복수의 리더
- 통합지향성 : 계층의 약화, 분업의 타파, 수평적 관계(평면화)
 - 수직적·수평적·지리적 통합
- 엔터그라운드 조직 : 구조와 계층을 파괴한 실무자 중심의 조직
- 학습조직 : 모든 구성원이 지식을 창출·활용·공유
- 의사결정체계의 집권성과 분권성
- 과정적 자율성
- 정보기술의 활용과 물적 자원의 축소
-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 중요
- 다원적인 대환경적 작용

☞ 2015 7급 선행정학 p. 377
☞ 2015 9급 선행정학개론 p. 320

17.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조직구조상의 특징에 따라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유기적 조직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넓은 직무범위
- ㄴ. 분명한 책임관계
- ㄷ. 물인간적 대면관계
- ㄹ. 다원화된 의사소통채널
- ㅁ. 높은 공식화 수준
- ㅂ. 모호한 책임관계

- ① ㄱ, ㄷ, ㅂ
- ② ㄴ, ㄷ, ㅁ
- ③ ㄴ, ㄷ, ㅁ

④ 가, 다, 나

[답] ① 가, 나, 다만 유기적 구조의 특징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기계적 구조의 특징이다.

●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의 특징

기계적 구조 예측 가능성 추구	유기적 구조 적응성 추구
· 좁은 직무 범위	· 넓은 직무 범위
· 표준운영절차	· 적은 규칙·절차
· 분명한 책임관계	· 모호한 책임 관계
· 계층제	· 분화된 채널
· 공식적·불인간적 대면관계	· 비공식적·인간적 대면 관계
· 고층구조	· 저층구조
· 명확한 조직목표와 과제	· 모호한 조직목표와 과제
· 분업적 과제	· 분업이 어려운 과제
· 단순한 과제	· 복합적 과제
· 성과 측정이 가능	· 성과 측정이 어려움
· 급진적 동기부여	· 복합적 동기부여
· 권위의 정당성 확보	· 도전받는 권위

☞ 2015 7급 선행정학 p. 313
☞ 2015 9급 선행정학개론 p. 264

18.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행정적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준다.
- ③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④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행정을 강조함으로써 지방적 특수성이 희생되기도 한다.

[답] ② 기관위임사무는 책임소재를 불명확하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 ① [O] 기관위임사무는 일반적으로 개별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한 포괄적 위임근거가 있으므로 맞는 지문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르면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
·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광범하고도 강력한 통제의 통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행정적 책임의 소재 불명확화
· 행정에 대한 지방 의회의 관여와 주민의 의사개진 및 주민통제의 통로 폐쇄
· 지방적 특수성과 배분적 형평 회생
· 지방의 창의성 몰살 및 불만 고조

☞ 2015 7급 선행정학 p. 785
☞ 2015 9급 선행정학개론 p. 645

19.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률적·제도론적 접근방법은 공식적 제도나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도 이면에 존재

하는 행정의 동태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② 행태론의 접근방법은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행정의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위이론의 구축에 자극을 주어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 ③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holism)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individualism)에 기반을 두고 있다.
- ④ 신공공관리론은 기업경영의 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정부에 이식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답] ④ ④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 신공공관리론은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하며 기업경영의 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공공부문에 이식하려한다는 비판이 따른다. 거버넌스나 신공공서비스이론은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 ☑ ① [X] 동태적 측면을 파악할 수 없다.
- ② [X] 생태론에 대한 설명이다.
- ③ [X] 반대이다.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가 개체주의이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전체주의에 기반을 둔다.

☞ 2015 7급 선행정학 p. 152
☞ 2015 9급 선행정학개론 p. 135

20.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관리론(사무관리론·조직관리론)에서는 계획과 집행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② 신행정학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적실성 있는 정책의 수립을 강조하였다.
- ③ 뉴거버넌스론에서는 공공참여자의 활발한 의사소통, 수평적 합의, 네트워크 촉매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하였다.
- ④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시민을 주인이 아닌 고객의 관점으로 볼 것을 강조하였다.

[답] ④ ④는 반대이다.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기업형 정부와 고객지향적 행정관에 의하여 시민을 주인이 아닌 고객으로 보지만, 신공공서비스는 시장원리의 무분별한 도입에 반기를 들면서 시민을 고객(국정의 객체)이 아닌 시민(국정의 주체)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 신공공서비스의 특징

·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 - "조종하기보다 시민에게 봉사"
· 담론을 통한 공익의 중시 -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이다."
·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 시민에 대한 봉사 - "고객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봉사한다."
· 책임의 다원성 -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 인간존중 - "생산성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한다"
· 시터즌십과 공공서비스의 중시 - "기업가정신보다 시터즌십(시민정신)과 공공서비스를 중시한다."

☞ 2015 7급 선행정학 p. 162
☞ 2015 9급 선행정학개론 p. 143